

‘100년 기업’ 발목 잡는 상속세제… 재계 “완화” 입모아

중기중앙회 관련 정책 토론회서 김기문 “기업승계, 고용증대로” 중견련 “기업 70% 상속세 부담” 송언석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업승계 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좌측부터)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노재근 코아스 대표이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정태현 흥진정밀 대표이사. /중기중앙회

대를 이어 경영하는 ‘100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적용 대상 기업 범위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높은 세금과 까다로운 승계 과정 때문에 문을 닫거나 불가피하게 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고용 창출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이참에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의지를 밝혔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재부 차관출신인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기업승계제도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제도에 관심이 많은 김기문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 형성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견련도 강화갑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후 중견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행 기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을 물려받는 이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적용,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 영위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은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은 500억원 등 최대 5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혜택을 받은 후 10년간 ▲해당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할 것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을 것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을 미달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4년 등에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늘리는 등 제도가 점점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선 세제 혜택이 너무 작고, 요건도 까다로워 승계가 만만치 않다는 불멘소리가 이어져왔다.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불편한 사회적 인식도 제도 개선을 더디게 했다.

중견련이 앞서 내놓은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의 69.5%가 기업승계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을 꼽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21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정책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은 ‘부의 대물림’도, 특정 중소기업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성공적 승계를 통해 기업이 유지될 경우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곧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4년 임기동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연임’에 들어간 강화갑 중견련 회장도 기업승계 전문가로 불리는 송실대 조병선 교수를 3대 중견기업연구원장으로 올해 초 영입한 바 있다.

전경련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

로 현재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까지 확대할 경우 매출은 52조원, 고용은 1700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기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000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 30년 이상 : 1000억으로 금액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기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 2인 이상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금액 확대 ▲기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적용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朴·文정부, 서울·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현황

기간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2019.3	2018.1	2017.5	2017.1	2016.1	2015.5.1	2014.1	2013.1
서울	82,711	70,500	60,635	59,585	54,081	48,039	46,974	46,632
6대 광역시	24,169	24,040	23,895	23,707	22,870	19,502	18,369	17,074
가격 차이	58,542	46,460	36,740	35,878	31,211	28,537	28,605	29,558

*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KB부동산, 국토연구원

서울 vs 지방 아파트값 “文 정부 이후 3억서 6억으로 격차 커져”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률 17% 부동산 규제가 ‘집 한채’ 선호 초래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으나 서울과 지방(6대 광역시) 간 아파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만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월 7억원을 돌파하고 올해 3월엔 8억2000만원까지 올라 1년 만에 17%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4040만원에서 2억4169만원으로 올라 0.54% 상승에 그쳤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과 6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모습이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과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5억8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 차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더 확대됐다”며 “전 정부에서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중위가격 격차가 평균 3억원대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13회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오히려 ‘뚝뚝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불면서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동차·조선 등 지역기반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내놓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암흑기를 맞는 모양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지역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지방 산업이 무너진 것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뚝뚝한 한 채에 집중하게 했다”며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상황에 맞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2030년까지 수소분야 국제표준 20% 획득”

산업부 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 수립 R&D 전문가 등 인력 100명 확충

정부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 연료전지제품 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3년안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술 5건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은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동향, 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 대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전력 연계 수전해, 차세대연료전지 등 10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추가 제안해 수소분야 전체 국제표준의 약 20% 이상을 획득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연료전지에 관한 국제표준을 1건 제안해놓고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수소경제 3대 분야별로 ▲모빌리티 8건(드론·선박·건설기계 등) ▲에너지 4건(트라이젠 연료전지 등) ▲수소공급 및 계량분야 3건(재생전력 연계 수전해, 유량계측기) 등 총 15건 이상의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수소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핵심부품에 대한 KS인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소경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관련 업체의 관심이 많은 KS인증은 충전소부품, 가정·산업용 연료전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 2022년까지 가정용 연료전지(SOFC) 등 13건, 2030년까지 드론용 연료전지 등 17건을 합쳐 모두 30건을 인증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45명인 수소경제 표준포럼도 기업계 개발자와 연구개발(R&D) 전문가 등을 추가로 영입해 내년까지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올 6월 수소 국제표준포럼에 이어 내년엔 수소기술(ISO) 총회를 개최해 2030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수소기술 국제표준 경쟁력 4위권의 선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대기업 유리천장 여전… 30대 기업 여성임원 ‘단 4%’

아모레퍼시픽 21%로 1위

국내 3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었다.

3일 인크루트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그룹사 포함)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임원 수는 3457명이었고 성별로 남성은 3304명, 여성은 153명으로 남성 임원 비율이 96%에 달했다.

기업별로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

은 곳은 아모레퍼시픽(21%)이었다. 이어 넷마블·네이버(각 14%), LG생활건강(12%), 삼성SDS(11%), 삼성화재·KB금융(각 8%), SK텔레콤·셀트리온(각 7%), 삼성전자(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5곳이었다.

한편 이들 기업의 임원 총 수는 3457명으로 전년(2017년) 3504명에서 47명(약 1.3%) 소폭 감소했다.

전체 임원 수 감소폭은 미미했으나,

기업별 임원 수 증감은 두드러졌다.

임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19.0% ↑)였고, 이어 LG(13.6% ↑), 롯데케미칼(11.0% ↑), 삼성바이오로직스(10.0% ↑)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지난해 임원 수가 전년 대비 14.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삼성물산(14.6% ↓), 현대모비스(10.0% ↓) 순으로 임원 수가 많이 줄었다.

/한용수 기자 hys@